

아베 '집단지위권' 도발...일본 각계 반발

도쿄 총리 관저 앞 이틀째 시민 1만명 반대 시위

헌법학자·학자·자치단체장들도 비판 대열 동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한 1일 일본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도쿄 나가타초(永田町)의 총리 관저 앞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를 연속으로 시민 1만명(주최측 발표)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오전부터 '전쟁 반대'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든 채 총리관저 앞으로 몰려든 시민들은 각의 결정 소식이 전해진

오후 5시25분께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아베 물러나라", "절대로 용납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 참가자가 "집단지위권 행사를 위한 개별법 개정이 추진될) 가을 임시 국회에서는 절대로 뜻대로 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 사쿠라 나오토(23)씨는 교도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에 가는 것은 우리들 또는 더 어린 세대"라며 "어째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가"라고 개탄한 뒤 "(각의 결정을) 철회시키도록 앞으로는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위는 수도권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해석으로 헌법 9조를 부수지 말라! 실행 위원회'와 헌법학자, 작가 등이 결성한 '전쟁을 시키지 않는 1천명 위원회' 등이 주도했다.

'1000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씨는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 견해와 전혀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내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으며, 헌법도 일본어도 파괴하는 이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나는 헌법이 정한 평화주의와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베 총리는 전후 일본을 나쁜 시대로 생각하고, 헌법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단체인 렌고(連合)는 "여당의 밀실 협의로 성급하게 결정됐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하는 담화를 고우즈 리키오(神律里季生) 사무국장 명의로 발표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무라코시 스스무(村越進) 회장은 "집단지위권 행사 용인은 입헌주의와 영구적 평화주의에 반하는 위헌"이라며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가와카스 헤이타(川勝平太) 시즈오카(静岡)현 지사, 가다 유키코(嘉田由紀子) 시가(滋賀)현 지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아베 내각에 대한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연합뉴스

日 야당들, 자위권 철회 강력 요구

다수의 일본 야당들은 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한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공산, 사민당 등은 각의 결정 철회를 요구했고, 집단 자위권에 찬성하는 입장이던 일본유신회도 아베 정권의 대(對) 국민 설명이 부족했음을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일본유신회, 생활당 등의 간부들과 도쿄 유라쿠초에서 가두연설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각의결정"이라며 "사실상 제동장치가 없고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하는 것)를 크게 벗어났다"고 말했다.

일본유신회의 마쓰노 요리히사(松野頼久) 의원단 간사장은 연설에서 "여당 협의로 정리되지마자 금방 각의 결정하는 것은 난폭하다"며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불안감을 국민이 갖는 것은 분명히 정부의 설명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일본공산당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헌법 개정과 다른 것은 대전환을 각의 결정으로 강행하는 것은 입헌주의의 부정"이라며 "헌법 파괴의 쿠데타라고 불러야 할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생활당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대표도 회견에서 "일본이 직접 관계없는 세계의 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하면 국민의 생명과 일본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행정장관 물러나라” 7월 1일 홍콩 중앙 비즈니스 지구에서 수천명의 홍콩 시민들이 보통 선거를 요구하는 대중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주권반환 17주년...51만명 '민주화 요구' 행진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17주년이 되는 1일(이하 현지시간) 홍콩 도심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규모 행진이 열렸다.

홍콩 시민 수십만명은 이날 오후 3시 빅토리아 공원을 출발해 홍콩섬의 금융 중심지인 센트럴까지 행진했다.

시민들은 더운 날씨에도 행진 시작 전부터 주변 도로를 가득 메웠으며 날이 어두워진 뒤에도 처음 집결지인 빅토리아 공원

으로 참가자가 계속 몰려들어 행진이 7시간 이상 진행됐다.

행진이 끝난 뒤에는 학민사조(學民思潮) 등 학생운동단체들이 센트럴의 일부 도로에서 밤샘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행진을 주관한 시민운동단체 민간인권진선(民間人權陣線·민진)은 이날 행진에 지난 2003년 행진 때의 50만명보다 많은 51만명이 참여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9만2000여명이

행진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2017년 직선제로 치러질 예정인 차기 행정장관 선거에서 반중(反中) 인사의 출마를 제한하지 말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했다.

행진에서는 또 이날로 취임 2주년을 맞은 령춘잉(梁振英) 행정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올해 행진 참가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데는 최근 행정장관 선거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비공식 국민투표'에 78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민주화 열기가 고조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달말 중국이 '홍콩 백서'를 통해 홍콩의 관할권이 중국 중앙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중감정이 고조된 것도 행진 참가자가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된다. 홍콩은 그동안 간선제로 치러지던 행정장관 선거를 2017년부터 직선제로 치를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반중' 성향 인사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입장을 보여 많은 홍콩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구온난화, 국토침수 위기 섬나라들 비상

남태평양 키리바시 공화국, 피지섬에 이주 영토 사들여

기후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 침수 위험에 직면한 섬나라들이 새 이주지 확보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 공화국은 국토 침수 위기국으로서는 처음으로 2000km 떨어진 피지섬에 이주 영토를 확보했다.

인구 11만명의 키리바시 공화국이 확보한 비상 피난처는 피지 북섬 바누아 레부의 2000㎢ 면적 숲 지대로 영국 국

교외로부터 877만 달러(약 88억원)를 주고 사들였다.

아노테 통 키리바시 대통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뒤를 따르는 나라가 늘어날 것"이라며 "전체 인구가 피지로 이동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필요가 생기면 그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도양의 몰디브는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침수 위기에 대비해 인도와 스리랑카 등에 주된 이주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공개했지만, 실행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어린이 4000명 전쟁터 끌려갔다

유엔 보고서,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등 분쟁현장 '소년병' 동원

유엔은 지난해 전세계 각종 무력분쟁에 '소년병' 등으로 끌려간 어린이가 4000명 이상이라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반기문 사무총장 명의로 유엔이 이날 발표한 분쟁지역 아동 실태 연례보고서는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23건의 분쟁상황에서 소년병으로 전장에 동원돼 살해당하거나 상해, 성적 학대 등을 당한 어린이들이 전세계에서 4천명 이상이라고 집계했다.

보고서는 분쟁에 아동을 이용하는 정권이나 급진 무장세력 명단에 최근 수백명의 소녀들을 납치한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을 새로 포함했다.

레일라 제루기 유엔 아동·무력분쟁 특사는 "보코하람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폭력을 저질렀으며 특히 최근 이들에게 납치된 소녀들의 안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코하람 외에도 최근 '이슬람국가'(IS) 수립을 선언한 이라크 수니파 반군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와 시리아의 알카에다 지부인 '알누스라 전선' 시리아의 극보수 반군 '아흐라르 알샤', 쿠르드족 군사조직인 인민수비대(YPG) 등이 보고서 명단에 추가됐다.

보고서는 이밖에 남수단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시리아 등을 포함한 7개국 정부와 50개 무장단체가 소년병을 징집, 전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연합뉴스

제41대 전동평 영암군수 취임을 축하합니다!

화합과 통합으로 하나된 새영암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
제41대 전동평 영암군수 취임식
2014. 7. 1(화) 14:00 / 영암군청

이이 복지영암 복지영암의 꿈을 꼭 이룰 것입니다

대불국가산단 경영자협회 회원일동 · 영암군 지역농협 운영협의회 회원일동 · 영암군 산림조합 · 영암군 농업경영인 연합회 회원일동